

# 서울시, 공무원 건강 챙긴다... '건강안심 직장' 추진

## 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시 과로·돌연사 예방 '직원 교육' '위기 전담팀' 만들어 집중 관리

서울시가 과로사와 돌연사 없는 건강 안심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진력한다.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 공무원 1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안심 직장 추진계획'을 내놨다.

이 계획의 골자는 ▲정신건강 증진 및 고위험군 관리 강화 ▲직원 건강 데이터베이스 구축 ▲직원 건강실태 분석 ▲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건강관리 지원

▲건강 인식 개선 및 건강생활 문화 조성 등이다.

시는 "공무원의 인적 자원 손실과 과로사 및 돌연사 예방을 위해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한다"며 "과중한 업무, 대인관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직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체계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본청과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예방,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사전에 발굴해 체계적으로 돌본다. 이를 위해 시는 직원 종합건강검진에 '정신건강 진단' 항목을 추가한다. 검진 결과 정신건강 주의군 및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위기 전담팀'을 통해 집중적으로 살핀다.

위기 전담팀은 대상자의 상태와 증상을 파악해 관리계획을 수립,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팀장을 맡는다.

시는 자해·타해 우려가 있는 대상자를 전문 진료에 연계하고 '정신보건법'에 의거해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9월 예산담당과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박 시장이 "공무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완벽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작년에만 3명의 공무원이 자택에서 자살하는 등 불행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시 공무원 중 자살한 직원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박 시장이 보여주신 성과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말단 공무원들만 사지로 몰아붙인 결과"라며 "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힐링센터 '유포'를 운영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검진과 상담을 실시한다. 본청과 서소문청사에서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상담실을 운영

한다. 팀워크, 소통증진 등 심리적 관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동료 상담사 양성 과정과 함께 직원 마음 관리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시는 "심리적 위기와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중재하겠다"며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진료비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내년 시민참여사업 제안 받아요"

시정참여형 350억 등 700억 투입  
오늘부터 홈페이지·우편·방문 접수

서울시는 2020년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 제안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운영하는 예산이다. 예산 규모는 약 700억원이다.

이번 시민참여예산 공모대상은 시정참여형(350억), 시정협치형(100억), 지역참여형(20억 내외)이다. 구·동단위계획형(240억 내외) 사업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한다.

사업 제안은 11일부터 내달 22일까지이며,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시는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한다.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 확인, 사업 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거



시민참여예산 사업 전자투표. /서울시

쳐 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시민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통해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다른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댓글을 달 수도 있다. 시는 우수 댓글을 올린 시민에게 모바일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정참여형 사업의 경우 시민참여예산 컨설팅단을 통해 시민 제안 사업의 품질을 보완한다. 민관예산협의회와 제안자, 사업부서 등이 참여하는 숙의 심사를 시

행해 제안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

시정참여형 사업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2단계 민관 숙의과정을 운영한다.

제안자와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사업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민관협치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 민간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예산학교 교육을 상설화하고 특화 교육을 다양화한다. 시민 역량을 높이고 자율적으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 사업 심사, 편성, 실행, 집행 등 전 과정을 공개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시민 요구에 맞는 좋은 예산 늘리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올 전기·수소차 1.4만대 보조금 지원

서울시, 전기승용차 최대 1350만원

서울시가 전기·수소차 2만5000대 시대를 연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1만 4000대 보급을 위해 11일부터 1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9055대, 화물차 445대에 각각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기택시는 작년 대비 30배 많은 3000대, 대형버스는 3.3배 늘어난 100대를 보급한다. 전기이륜차는 1000대를 보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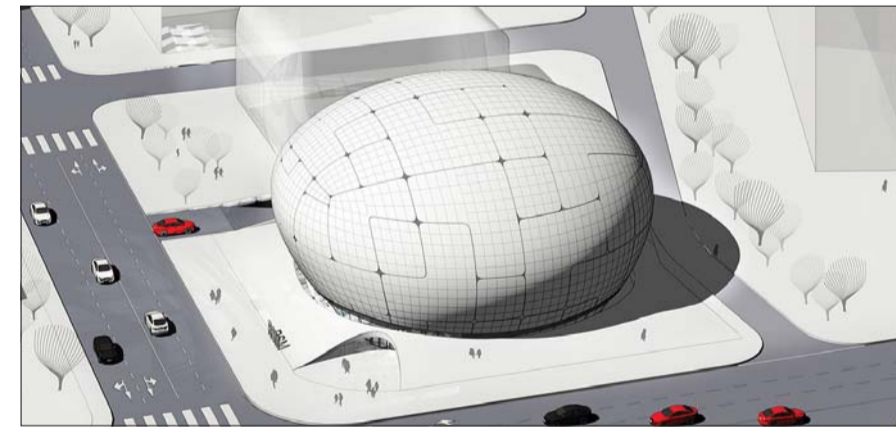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시는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 사업 1차 공고'를 실시한다. 1차 보급량은 전기차 4964대(승용 3620, 화물 444, 이륜 900), 수소차 58대다. 신청 대상

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법인·기업·공공기관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정해진 기간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한 구매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대기 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1206만~1350만원, 전기이륜차(경형) 2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을 정액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전기차 통합콜센터, 환경부 통합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2022년 도봉구 창동에 들어서는 로봇과학관 조감도. /서울시

# 경기도, 노후 산단 3곳 선정 20억 지원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 추진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3개 산단을 선정하여 도비 6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YES산단 육성사업'은 그간 국가재정사업에서 소외돼온 중소규모 노후 일반산단을 대상으로 재정비를 지원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민선7기 경제분야 공약목표인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의 일환으로, 국가재정사업 외 중소규모 일반산단에 대해 재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여기서 'YES'는 'Young'과 'Easy', 'Smart'의 앞 글자를 따와 만든 명칭으

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젊고, 편리하고, 첨단·고부가가치의 특화된 산단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도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올해 도비 6억원, 시·군비 14억원 등 총 20억원을 들여 도내 노후산단 3개소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각 산단 특성에 맞는 혁신·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젊은 산단(Young)'을 만들기 위해 도로·주차장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확대를 통한 접근성 제고, 진입로 경관 및 가로수·담장 정비 등 이미지 개선을 지원한다.

'편리하고 편안한 노동/정주환경 조성(Easy)'을 위해서는 업무공간 개선, 기숙사·체육시설·보육시설·근로자 자치활동 공간 확충 등 청년 근로자들도 어려움 없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지방자치 박람회 10월 개최 경기도, 수원컨벤션 센터서

올해로 7회를 맞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가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수원 광교지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박람회 유치 신청했으며, 최근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시, 중앙과 지방의 화합 및 소통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처음 열렸다.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매년 10월 29일에 열리고 있으며 그동안 서울, 광주, 전북(전주), 경북(경주) 등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3월부터 박람회 준비단을 구성해 정부, 시도, 주민자치, 향토 등 4대 분야 정책 홍보전시관과 주민참여마당,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문화예술사, 먹거리 장터 등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 2022년 창동에 국내 첫 '로봇과학관'

서울시, 설계안 확정... 307억 투입

오는 2022년 도봉구 창동에 국내 최초의 로봇과학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022년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건립될 로봇과학관의 설계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로봇과학관은 도봉구 창동 1-25 일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6305㎡ 규모로 조성된다. 총 30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7개 팀이 참여한 국제 공모에서 타키 건축가 멜리케 알티니시크의 설계안이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선작은 로봇이라는 미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정체성이 돋보이는 외관과 로봇을 활용한 시공 계획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로봇과학관은 AI, 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최신 로봇과학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새로운 로봇을 탐구할 수 있는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 과학문화 확산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건립 추진단과 운영 자문단을 미리 구성해 설계 및 시공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건축 설계 기간 중에는 전시 설계도 병행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로봇 산업은 미래지향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서 로봇 관련 전문 과학관이 과학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교육·체험 기회를 늘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